

제325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5 호

국회 사무처

2014년6월1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부의된 안건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1

(10시04분 개의)

○의장 정의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는 대로 바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김한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립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정희 의원 대표발의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또 한 말씀 올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0일자로 우리 제19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한 보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원 구성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5일 날 제출된 국방

부장관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20일간의 청문 기한이 있기 때문에 6월 24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및 지도부는 원 구성 협상을 가능하시다면 오늘 중으로 끝내어서 내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좀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10시07분)

○의장 정의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입니다.

저는 오늘 무겁고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역사 앞에서 얼마나 겸허하고 솔직한지, 지금 역사 앞에서 있는 이 순간 부끄럽지 않은지 성찰하고자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우리 국민은 끝없이 문

고 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어떻게 300 명이 넘는 실종자 중에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가?

지난 4월 16일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던 아이들이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장과 선원들이 제일 먼저 탈출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가치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사고 발생 4일이 지나서야 구조팀이 선내로 진입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정부는, 청와대는 무엇을 했느냐는 국민적 지탄이 이어졌습니다. 허둥대며 속수무책이던 박근혜정부의 모습을 온 국민은 그대로 봤습니다. 나라가 어찌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 가라는 탄식이 국민들 사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세월호 구조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국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세계 15위 경제대국의 자긍심을 가졌던 국민들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세월호 국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야, 유가족이 함께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역 없는 조사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19대 후반기 국회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이 진상규명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앞에 우리 스스로가 반성과 성찰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탐욕과 규제완화로 미국에 금융위기가 왔다면 우리에게 세월호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나라를 바꿨듯이 우리에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국민을 걱정하는 대통령이나, 국민이 걱정해야 되는 대통령이나, 국민이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할 것이냐, 국민의 눈물을 대통령이 닦아 줘야 할 것이냐.

국정운영 기초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기분 좋으실리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우선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반쪽 대통령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돼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국정 경협이 전무한 극단적으로 편향적인 언론인을 총리내정자로 지명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책임총리는 처음 들어 본다는 엉뚱한 답변을 하는가 하면 일제 식민지배는 하나님 뜻이다, 남북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다, 제주 4·3 사건은 폭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내정자인지 일제 조선총독부의 관헌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장면이 어제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총리로 임명한다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삼일절에, 8·15 광복절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얼마 전 돌아가신 배춘희 위안부 할머니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께서는 답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붕괴는 아직도 멈추지 않았음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초를 바꿀 의사가 과연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가를 반쪽 지지자만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을 또다시 강하게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전이나 선거 후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약속하고 당선되니까 파기했습니다. 지방선거 때는 도와달라고 읍소하더니 선거가 끝나니까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시하는 원칙과 신뢰, 화합의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 정치와 경제가 안정된 것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개조론

을 언급하며 정부조직법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정부 출범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 정부개편안은 급조된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또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키운 것이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사고였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개조’라는 말은 전제군주나 군국주의자들이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개조론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바로 국민이기에 국가개조는 곧 국민개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연 누가 누구를 개조하는 것이냐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명령은 국민을 개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를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며칠 전 울진 한울원전 1호기가 7개월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설계수명 30년을 7년이나 넘긴 고리원전 1호기는 2년 전에 멈춰섰지만 재가동이 승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원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원전 역시 해수부 못지않은 원전마피아와 뇌물수수, 납품담합 등의 부패로 언제 세월호와 같은 판박이 사고가 날지 모르는 핵폭탄과 같은 우리 사회의 위험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17기 원전 모두를 10년 내에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에 수명연장 신청 예정인 고리 1호기에 대해서 2017년 이후 수명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에 우리 국회가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고리 1호기 폐쇄에 따른 전력부족분을 확충하기 위한 친환경대체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생명정치와 국가안전에 국회부터 앞장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정치를 위해 우리는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의 5대 신사회위험을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노후불안입니다.

우리나라 노후빈곤율은 45%로 OECD 국가 중 1위, 노인 자살률 1위, 반면 GDP 대비 노후복지지출률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기초연금 논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한 선거공약으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노후불안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어르신 복지문제를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만들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두 번째 위험, 주거불안입니다.

전셋값이 5년 3개월째 치솟고 있습니다. 월세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에서 빚어진 전셋값 폭등이 박근혜정권 들어서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이것 역시 속수무책입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청년실업입니다.

청년고용률이 2013년 39.7%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고, 20대 대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청년고용할당제와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 출산·보육 불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18명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2500년이 되면 한국인이 사라집니다. 적어도 국가를 운영하려면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른 보육제도,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도 설치기준 완화로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근로빈곤입니다.

대기업은 돈이 쌓이는데 일하는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형편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세습자본주의의 폐해가 빈곤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근로빈곤층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을 현실화한 생활임금 확대, 모든 근로자에 4대보험 적용 등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같은 5대 신사회위험의 해결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정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여야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5대 신사회위험으로부터의 탈출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향후 우리 사회가 맞이할 큰 변화는 국회의 위상 변화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서야 삼권분립의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시국회를 만들어서 1년 내내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고 정부를 감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명실상부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에 끌려다니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를 견인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분야별로 복수화해서 보다 많은 국회의원이 꼼꼼하게 법안을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안 심사는 국회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폭주하는 법안을 보다 내실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소위 복수화는 꼭 필요합니다.

예결위의 일반상임위화도 실현해야 합니다. 예결위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의 혈세가 어디로 가는지 감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정보위의 일반상임위화는 국정원 개혁의 핵심입니다.

원내대표의 주례회동 정례화는 이처럼 일하는 국회의 시작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하는 국회의 일환으로 세월호특별법위원회, 정부조직법위원회,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위원회에서는 범국민적 진상조사 위원회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예방하는 대책을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를 만들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는 일명 김영란법, 안대희방지법, 유병언법 등의 입법과 접대비 실명제의 도입 등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후반기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법 중의 하나가 희망의 사다리법입니다. 계층 이동의 문호를 개방하고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처진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지속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돈 없는 사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도 로스쿨을 다니지 않고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치우쳐져 있는 특혜를 없애고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시장에서의 반칙이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오게 해서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보상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에 이어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치검찰의 횡포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이 BBK로 검찰에 발목이 잡혔다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은 박근혜정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최근에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는 우리 사회의 적폐이며 척결 대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유병언 전 회장 한 사람 못 잡아서 대통령이 나서고 군 병력까지 동원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대목 아닙니까?

정치검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국정원과 검찰의 권력기관 개혁에 국회가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교육의 근본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중되어 왔던 경쟁교육이 아니라 협력교육, 가치지향, 사람존중, 사회정의에 충실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4일 선거에서 사람존중의 가치를 내세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것은 바로 국민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적어도 교육에서만큼은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는 기회의 보장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온 국민이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공존으로, 독점에서 공유로 그리고 이윤에서 인간으로 우리의 관심이 옮겨져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개성공단을 방문한 염수정 추기경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 화합하는 개성공단을 방문하셔서 아픔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염 추기경님의 말씀대로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남과 북이 화합하면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희망을 가로막는 가림막을 걷어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비정치적인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을 더 줘야 합니다.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와 10·4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 간 신뢰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되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통일은 한반도에서 안보불안 요소를 없애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 통일특위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실종자도 구하지 못한 세월호의 길을 더 이상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진정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패와 비리, 관행과 유착의 카르텔이 꽃 같은 아이들을 죽음의 항로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부는 소수에게 독점되고 위험은 약자에게 집중되는 위험사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탐욕과 돈에 눈먼 대한민국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의료 영리화 등 무분별한 외주화에서 탈피해서 인권과 정의가 중시되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나라, 바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의 모습입니다. 우리 국회가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보다 좀 더 정직해져야 합니다. 위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이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믿고 있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성찰과 상상력 그리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되느냐, 아니면 슬픔을 딛고 서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는 역사의 주역이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떠한 정략적, 정파적 이해관계도 이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어려운 일에 봉착해서 힘든 일정을 보내는 대통령의 노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백지장 마주 들 듯 야당과 함께 들어 주십시오.

5대 신사회위험을 극복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의 정치,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 일성으로 정부 여당이 바른 길을 걸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도 도와주십시오.

야당도 앞장서서 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서와 생활감각을 잘 살피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공황에서 미국을 구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이 명령하시는 것, 국민이 원하시는 일만을 받들어 행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눈물이 우리에게 하던 말을, 여러분의 슬픔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실종자 한 명을 찾아낼 때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슬픔과 분노를 승화시켜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진보 보수를 넘어서 통합의 시대정신을

실천해야 할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우리 존경하는 박영선 원내대표님, 연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았고요.

우리 국무총리님과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들간 우리 양당 대표님들의 연설을 경청해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고가 많았고요.

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깊이 성찰하셔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 의원(24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서기호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연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영표	홍의탁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190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정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남인순	노영민	노옹래	노철래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김재운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문병호	류문재	류문정	문희상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명재	김현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남인순	노영민	노옹래	도종환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윤옥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서기호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송광호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주선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오영식	오세영	유원식	유운근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서기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종
유성엽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군현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상정
이노근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이상직	이언주	이완구	이완영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이인영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오병운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이종진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이철우	이춘석	이한성	이현재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인재근	장병완	장윤석	전순욱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진정희	진해철	정문헌	정성호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윤호중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정진후	정호준	조명철	조정식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한명숙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오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의락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홍익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황인자	황주홍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산회 시 재석 의원(231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욱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김경협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병국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조경태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경 환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중 학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주 흥	황 진 하	

○청가 의원(12인)

강 창 희	길 정 우	김 명 연	김 선 동
김 승 남	김 용 익	부 좌 현	안 덕 수
이 병 석	이 석 현	장 하 나	한 기 호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직무대리	임 병 규
의 사 국 장	김 한 근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정 홍 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 오 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문 기
교육부 장관	서 남 수
외교부 장관	윤 병 세
통일부 장관	류 길 재
법무부 장관	황 교 안
국방부 장관	김 관 진
안전행정부 장관	강 병 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 진 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동 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 상 직
보건복지부장관	문 형 표
환경부 장관	윤 성 규
고용노동부장관	방 하 남
여성가족부장관	조 윤 선
국토교통부장관	서 승 환

○출석 정부위원

해양수산부 차관	손 재 학
----------	-------

【보고사항】

○의안 제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4. 6. 11 이명수·이현승·이노근·안효대·이이재·함진규·조해진·민병주·신경림·김을동 의원 발의)

6월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2014. 6. 11 전정희·추미애·윤후덕·부좌현·김성주·이찬열·최규성·윤관석·이윤석·

조경태·전순옥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2014. 6. 11 전정희·추미애·윤후덕·부좌현·김성주·이찬열·최규성·윤관석·이윤석·조경태·전순옥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2014. 6. 11 전정희·추미애·윤후덕·부좌현·김성주·이찬열·최규성·윤관석·이윤석·김춘진·전순옥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4. 6. 11 정희수·이만우·정문현·이명수·심학봉·이자스민·김현숙·이에리사·황인자·성완중 의원 발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2014. 6. 11 정부 제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2014. 6. 11 정진후·심상정·김제남·박원석·서기호·박민수·도종환·장하나·강동원·김용익 의원 발의)

이상 9건 6월 25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4. 6. 11 정희수·김현숙·이만우·이한성·이명수·심학봉·송영근·김태환·김상훈·성완중 의원 발의)

6월 2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4. 6. 11 윤재옥·유승민·신동우·이한성·김을동·정희수·권성동·권은희·김재경·이종훈 의원 발의)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

(2014. 6. 11 신경림·문대성·윤명희·김영우·김상민·김장실·정성호·이채익·유승민·염동열·이한성·이명수·황인자 의원 발의)

6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4. 6. 11 강동원·김영록·장하나·서기호·
전병헌·유대운·김기준·민홍철·윤후덕·
유은혜·김광진·임내현 의원 발의)

6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보고서 제출**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각각 제출
되었음

2014. 4. 21 법원

2014. 4. 8 국방부

2014. 4. 29 외교부

2014. 4. 15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6. 11 문화체육관광부

이상 5건 소관위원회에 회부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서면답변서 제출**

광복회관 신축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4. 6. 11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